

社 說

대학인들의 '말할자유', 대학신문 —— 최근 대학신문의 발행증지를 보며

대학신문이 흔들리고 있다. 고대신문이 신년호·졸업호를 발간하지 못했고 서강학보도 지난 5일자 신문이 배포되지 못하는 등 배포·발행중지등으로 마찰을 빚고있는 대학신문사는 전국적으로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조짐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고대신문은 1월 중순 주간교수에 의해 성적 불량 이유 학생기자 5명이 해고되었으며 편집국장인 학부생제 폐지와 대학원생을 부장으로 영입, 신문학교 수감생에 한한 수습기자 선발을 끝자로 한 '고대신문 개편안'을 총장에게 제출했다. 연세대 대학신문 '연세춘추'도 수습기자 자격을 2학년 이상, 학점 2.5점 이상으로 할 것에 반발하여 2일자 신문이 나오지 못했다.

이밖에도 광고의 공개입찰, 기자자격제한 조치 등으로 외대학보등도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진통은 교육부, 학교측의 '대학신문 운동권 대변지론'과 학생들의 '대학신문 자율권 침해'라는 전통적 대립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립에는 어찌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신문'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형태이건 '대학'의 '언론'이며 '여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신문'은 대학인의 말할 권리와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기억은 할 말이 있는 데도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상당부분 기성언론을 신용할 수 없는 것도 그들이 침묵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말할 자유'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

은 아무도 없다. 결국 대학언론은 대학의 말할 자유인 것이다.

대학신문이 아카데미즘의 토론회장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카데미즘의 요즘 대학사회 변화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며 운동권의 기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다만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더 많은 대학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에서, 운동장에서, 교수님연구실에서 휴게실에서, 총장님의 방에서, 최루탄속에서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더 많은 대학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함을 아쉬워 할 뿐이다. 물론 이를 위해 더욱 정진이 필요함도 알고 있다. 다만 대학언론을 기성언론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학원생이 부장이 되고 언론중재인이 대학언론에 투입된다든가 학점으로 학생기자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학사회는 다양하다. 소위 운동권이 있다고 한다면 비운동권도 있으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고, 부유한, 글 잘쓰는, 노래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대학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 모두에게 말할 자유가 있으며 대학신문은 그들의 올바른 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음을 인정하지만 충고와 질책을 수용할 줄도 안다. 다만 대학신문을 기성신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대학인 모두가 경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율과 국고보조 통한 대학발전 —— 93년 대학학생지원 조정지침에 부쳐

교육부는 지난 12일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정원을 6천명 늘리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우선적으로 학과 신설 및 증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93학년도 대학학생지원 조정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산업인력공급계획에 따라 내년도 대학정원을 전기·전자·통신·기계·화학 등 공학계열과 첨단분야에 집중 증원하고 수도권 대학에도 이공계열에 한해 2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계와 사범계학과와 신·중설을 억제하는 한편 산업계 근로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야간학과의 증설 및 증원을 허용하며 산업계 근로자 입학실적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규모를 1백20명선으로 잡고 우수대학에 대한 예외를 인정 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교수 확보율이 60%이상이 대학에만 증원을 허용하며 교육 시설, 실험실비, 도서확보율, 재단전입금, 실정 등 교육여건관련 지표를 활용해 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우선 증원 및 증과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대학평가제를 공식적으로 '대학평가인정제'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작년 10월에 가시화된 이후 올해 공식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은 학교측의 평가인정제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이번 학기 평가인정제를 대비 전자과교수 7명을 포함하여 전체 31명이라는 대폭적 교수채용이 있었으며, 학내 연구중토조의 활성화와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제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교육환경개선과 연구기자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없이 공학계열로 대표되고 있는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기 십상일 것이다.

둘째는 공학계열이 학교의 교육여건과 등급을 가늠하는 새로운 잣대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학문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자·전기·통신·기계 등의 학과가 인력수급면에서 상당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집중됨으로 해서 공학계열의 양적·과다팽창이 타계열에 대한 교육재정지원의 소홀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 함은 학문의 위상에 있어서 학교내에 균형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중점육성학과와 발전계획이 세워져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평가로 인한 타의적인 발전방향의 수조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평가인정제'는 3등급으로 나누어 서로 대학끼리 경쟁함으로써 대학자체의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정책의 열악함을 타계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 양 갖추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준다고 바라는 불어날을 그런 위치가 아니다.

사립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립대와 같은 수준의 국고보조금 지급과 대학자율에 맞는 정원조정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길임을 알자.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14대 총선거사들과 TV방송 첫머리의 선거관련 보도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면 '선거' 자체에 가장 열기를 더하고 있는 수훈감은 바로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파급력이란 대단한 것이어서 '언론'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방송과 신문들이 자기 색깔을 띠면서 어떤 역할을 하려드는 이때 우리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는 큰 사건이 있을시엔 마음대로 방류하는 언론들의 노예복을 소화할 능력이 마비된 것이 적지 않았기에.

소위 말하는 제도언론의 이번 제14대 총선거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2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의 부추김과 공명선거를 내세운 무조건적 여권 비호의 속으로 볼 수 있다.

투표율의 저조로 귀결되는 정치냉소주의



선거 양비론 부추기는 언론보도

리하다는 것은 성급한 단정이라야 아무런 대안없이 무책임한 발상만을 늘어놓고 있다.

언론에 특히 주목할 것은 아예 정치무관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책가를 막아버려려 하는 것이다.

바로 서울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대학

의 조장은 공명선거(동아 3월11일, 서울 3월12일)와 금권선거의 타락상을 내세워 야공방을 함께 하여 정치회의주의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13일자는 '유권자 냉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 아래 아예 정치적 무관심을 관망·방기하고 있다. 또한 저부표율이 여당에게 유리

여권지지경향으로 13일자 조선일보는 각당의 정당 연설비 시작이라 최대한의 청중을 동원했다며 수 많은 인파사진을 1면에 실는가 하면 각 제도신문들은 선거전

은 세상을 위해'서 투표를 권하고 있으며 대검의 대학가 부재자투표 단속방침을 12일자에 다루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연이어서 지면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13일자 대학가 귀향단 꾸림)

언론의 편파보도는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익숙함에 젖어 있기 보다는 지금은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과제가 '선거'로 다가온 이상 선거에 대한 각 언론들의 보도양태를 단지 폭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보여준듯 민주화를 부르짖던 6공에 대한 배신감과 회의감으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이제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6공과 제도언론에 심판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선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은희 記者)

비싼 대학생 만드는 고물가시대

경제난에 허덕이는 대학가주변의 물가인상 실태



대학가 주변의 물가가 선거국면, 사회물가불안과 더불어 턱없이 높게 뛰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자식을 유학보내는 집이 갈수록 불어오는 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과 뒷바라지 해주어야 할 생활비가 날로 치솟기 때문이다. 대학가 주변도 다이상싼값의 동네로 남아 있지 못하다. 물론, 대학주변의 가게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등록금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비도 촉박해 하는 학생들에게는 여간 큰 고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렇다고 많은 보수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마땅한 자리를 얻었다 해도 용돈 등으로 쓰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빈곤의 순환은 숙박비와 함께 생활비를 잡아서 타거나 벌어야 하는 지방출신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 대학주변의 하숙, 자취, 음식점의 가격이 보통 20~30% 정도 오르고 있다.

실제로 회계동 일대를 보면 이미 하숙방의 경우 25만원선으로 약 20%인상 되었으며 1백만원의 보증금을 주고도 2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방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음식값의 경우도 얼마전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값을 2천원으로 올린데 반발해 '밥값안하' 투쟁을

발하기도 한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업자와 음식점업자들은 전반적인 사회의 물가인상상을 감안한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결국 음식값은 1천7백원으로 인하 확정되었지만 다른 각가지 서비스 요금도 계속오르고 있다. 카페의 경우 커피, 차값이 1천5백 원 또는 2천원대로, 당구비도 7백원으로, 술값, 영화관람비, 목욕비 등까지 우후죽순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몸집이 작고 집안에 있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나오고 있다.

가격인상은 사천리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원캠퍼스 주변은, 식당들의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지리적위치와 더불어 업주들의 제시하는 가격 안에 거의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학자추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수원캠퍼스도 이미 지난해 3월 초에 밥값문제로 불매운동의 홍역을 치루었고 올해에도 하숙·자취들의 밥값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년에는 업주들이 달마다 지불하던 방세를 학기단위의 일시불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고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밥값 인상과 더불어 한학기에 백

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학생들은 서천리자치학생협의회(서자협) 등의 자취생모임들을 준비하면서 업주들의 담합인상에 대비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학생복덕방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여 방을 구하는 학생과 업주를 연결해주고 좀더 저렴한 값에 방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대학가의 물가인상에 대한 대응은 '물가와외의 전쟁', '물가에 대한 전면적 투쟁'으로 과장되어 불리기도 하지만 근처에는 이미 불안전한 사회의 물가등한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연두부터 모든 버스요금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앞서 보았듯이 각 업주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반찬재료값, 부식비, 임대료 등이 강충 뛰어올라 그 경제적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었음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몇일 앞으로 다가올 선거와 맞물려 풀린돈과 앞으로 풀릴돈으로 인플레이의 위험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의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곳곳에서 느슨한 행진력을 보이자 더욱 강한 총수요억제책을 요구하는 기사가 각신문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선거에 편승한 가

격인상도 한부분일뿐 물가인상의 주범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다. 6공시절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한 물가불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 우선으로서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왔지만, 그들이 시설 투자보다 지하경제를 늘려나가는 데서 그 우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자호황의 종막도 한뼘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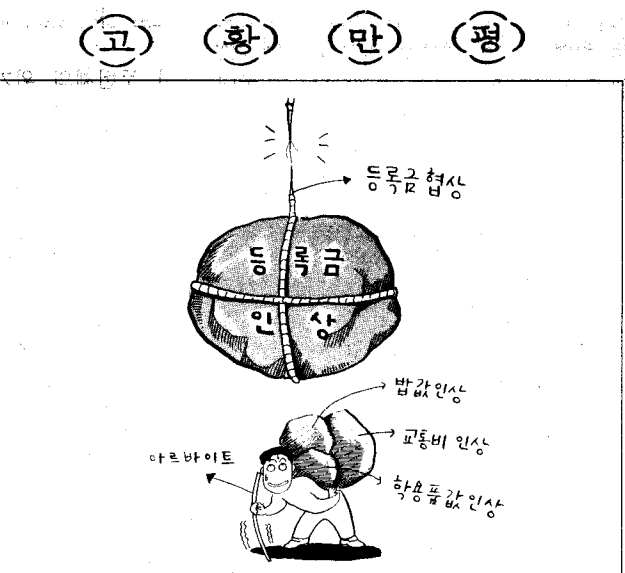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경제개혁을 통한 물가인정은 근본적인 개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을 보아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일단은 부족하지만 학교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함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여파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학교내 학생식당의 질을 가려 만큼이나 높여야 하는 것이라든지 수련캠퍼스처럼 국산관동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학교안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 주변 물가인상에 대한 논의만큼 어렵고 각각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학생이나 업주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만큼 학생 또는 업주 어느쪽의 화살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우선 경제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원초적 해결책이겠지만, 단시일내에 성취가 어려운 상태에서 학내 복지시설의 확충을 모색하고 학생들과 주변업주들 간에 공동선의 합의를 내어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특집부)

하숙·자취등 주거비 20~25만원으로 20%상승 학내 복지시설 확충과 경제개혁이 근본적 해결책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벽이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다?



●베를린의 장벽 한조각, "FREIHEIT" 독일어의 "자유"인 듯한 글자와 일부가 보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던 날 한반도에서 건넌 한 청년의 노점은 남다른 바였습니다.

둘로 갈라졌던 하나가 다시 합쳐지는 당연한 모습을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벽에서 관념의 벽, 그리고 분단의 벽까지 — 아직 "무너뜨려야 할 벽들"이 많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생각한 까닭에 더욱 그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문화와 생활습관까지를 몸에 익히는 것이 주어진 일의 전부였던 나의 해외파견사원 생활... 나에게는, 벽이 무너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발견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꿈은 원래하게, 인생은 소중하게 — 창립 이래 "인제제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종합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다양한 제도와 지원으로 꿈을 주는 평생직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독립에 1년간 피관되었던 이재현씨(1988년 8월 입사)이 베를린 장벽을 깨고 있다.

삼 성 물 산